서울 9급 평가 해설

정 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①	④	③	②	④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②	①	④	③	②	③	②	①

해 설

1. ① (가)는 좁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좁은 의미로 파악하면 문화는 '높은 교양'이나 '보다 발전된 것'을 뜻하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활양식으로서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 됩니다. (나)는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넓은 의미로 파악하면 문화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성을 포함하는, 총체로서의 생활양식이 됩니다.
③ 좁은 의미의 문화든 넓은 의미의 문화든 문화는 선천적·유전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이 아니라 후천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한 결과입니다.
④ 좁은 의미의 문화는 '높은 교양'이나 '보다 발전된 것'처럼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지만 넓은 의미의 문화는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그것이 발생한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절대적 기준에 의해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② 기계와 같은 문화 요소도 좁은 의미의 문화에 포함됩니다. 문화는 크게 물질 문화와 비물질문화로 나눌 수 있고 기계와 같은 요소는 물질문화에 포함됩니다.

2.

근대 민법 원리의 한계		근대 민법 원리에 대한 수정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소유권 공공의 원칙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 적합 의무가 강조됨
계약 자유의 원칙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계약 강제의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함	계약 공정의 원칙	공정하지 못한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과실 책임의 원칙	경제적 강자의 책임을 면하는 구실이 되기도 함	무과실 책임주의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가)는 청구권적 기본권, (나)는 사회권적 기본권, (다)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① 청구권적 기본권은 수단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의 대표인 재판청구권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재판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재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②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소극적 기본권입니다. 원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국가적 공권입니다. 소극적 기본권이란 의미는 국가에게 소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 권

리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국가에게 적극적 행위 예를 들면 '돈 줘!'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 적극적 권리입니다.

③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입니다.

④ 소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은 자유권이고 그 이외의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은 모두 적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입니다. 참정권이 적극적이라고 할 때에는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국가의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① 국가의 정책 결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투입입니다. 정치과정에서 국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선거입니다.

②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③ 정책 결정 기구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가장 많이 공급해 주는 정부가가장 좋은 정부이다."라는 적극 국가론이 대두되면서 사회 문제 해결,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특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 생활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④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정치 과정은 민주주의 국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근대 이전의 국가들이나 북한과 같은 권위적인 정부일수록 정치 과정에서 투입이 생략됩니다.

5. (가) 세대 간 이동이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나타나는 계층적 위치의 변화를 의미하고, (나) 세대 내 이동이란 한 개인의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계층적 위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 구조적 이동이란 사회 구조의 변혁이나 혁명 등 기존 사회 계층 구조가 변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위치 변화를 의미합니다.

① 부모와 자녀의 계층 비교를 통해 세대 간 이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층을 세습했다는 것은 세대 간 이동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층을 세습한 사람의 계층의 위치 변화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부모 자녀 세대 간에 계층적 위치가 변화한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생애 동안 계층적 위치가 변화한 것이 되어 세대 내 이동이 됩니다.

③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갖는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대 간 이동이나 세대 내 이동 등 거의 모든 계층 변화가 금지됩니다.

④ 신분제도의 폐지는 구조적 이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분제도가 폐지되면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이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노비인 경우 신분제도가 폐지되면 아들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 간 이동입니다. 또한 노비 신분이었던 사람이 자유민이 되는 것은 세대 내 이동입니다.

6.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행위 주체는 정당입니다(A).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 행위 주체 중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단체입니다(B). 따라서 C는 개인과 이익집단 모두 될 수 있습니다.

① 정당과 시민단체는 모두 공익을 추구하지만 정당은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를 배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구별됩니다.

② 정당은 정권 즉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행위 주체이므로 국가 내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을 맺는 몇 개의 특수 쟁점 영역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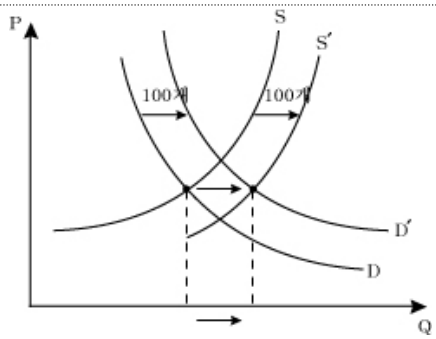
③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심지어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개인

도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 주체들이 여론 형성 기능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④ 이익집단은 정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로비 활동을 펼치거나 여론에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결정에 반영합니다.

구분	차이점					공통점
	관심 대상	이익 추구	정치 권력	정책	발전 기반	
이익 집단	몇 개의 특수 쟁점, 영역	부분적	비(非)추구	단기적·특수적	소수 관련자	•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 여론을 형성함
정당	사회의 모든 쟁점	전체적	추구	장기적·보편적	국민 전체	

7.



④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모두 형태를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은 변화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합니다.

8. (가)는 사회보험, (나)는 공공부조, (다)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①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는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보험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게 되면 재원 마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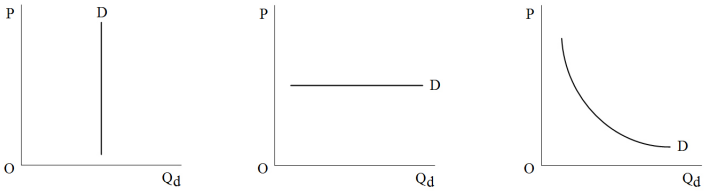
② 보편적 복지는 선택적 복지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선택적 복지란 가장 취약 계층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복지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그 복지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보다 더 널리 확장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취약 계층이 복지수혜계층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공공 부조는 선택적 복지 이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③ 사회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기업주, 국가가 공동 부담하여 수익자도 소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부조는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④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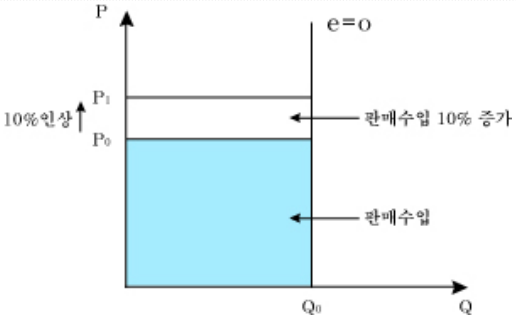
9. ①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②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약은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국제 관습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③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국내법은 법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④ 헌법 제53조 제7항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뿐이지 법률이 아닐 뿐 아니라 3월15일은 헌법 제53조 제7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4조 제2항은 '조약에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가 모든 협상국에 대해 확정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비엔나협약 제24조 제2항의 효력 발생에 관한 합의로 발효된 것입니다.

10.



(i) $\varepsilon_p=0$ (ii) $\varepsilon_p=\infty$ (iii) $\varepsilon_p=1$

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 때 즉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 곡선은 (ii)와 같이 수평축에 평행하게 나타납니다. 수요 곡선상의 한 점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의해 수요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점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수요 곡선이 수평축에 평행하므로 수요 곡선과 만나지 못하고 결국 수요량은 0이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수입은 10%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0 즉 100% 감소하게 됩니다.
② B재의 판매수입은 변화가 없습니다. 판매수입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1이 됩니다. 수요곡선은 (iii)과 같이 직각 쌍곡선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1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똑같은 비율로 감소하므로 판매수입에는 아무 변화가 없게 됩니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격이 상승한 비율로 수요량이 감소한 것이므로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린 진술입니다.
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수요 곡선의 형태는 (i)과 같습니다. 가격이 10% 상승할 때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입니다. 판매수입은 가격×수량이므로 수량은 변화가 없고 가격만 10% 상승하면 판매수입도 10% 상승하게 됩니다.



11. <A>의 의원 내각제와 <B>의 대통령제의 본질적인 차이는 '선거를 몇 번 하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두 번 하는 <B>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의회가 구성되고, 별도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 수반이 되어 집행부를 구성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입니다.

①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② 의원내각제 정부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와 내각의 인적 구성이 동일합니다. 즉 의원이 각료를 겸직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입니다. 내각의 각료도 결국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정부에서는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③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내각도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④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정부의 특징입니다.

구분	의원 내각제 (권력융합적)	대통령제 (권력분립적)
발달	영국에서 군주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발달	미국의 독립 과정에서 영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정부 형태를 추구하면서 발달
성격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일원적 정부 형태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
특징	• 의회에서 산출된 수상이 내각을 구성함 •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함 •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함 • 의원은 내각의 각료 겸직이 가능함 • 내각은 법률안 제출이 가능함	•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통괄함 •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 안 됨 • 의원은 각료 겸직이 불가능함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
장점	•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함 •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용이함	•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이 안정됨 • 국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가 가능함
단점	• 다수당의 횡포 우려 • 군소 정당 난립시 정국 불안 우려	•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함 •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독재 정치가 우려됨 • 의회와 정부의 대립 시 조정이 곤란함

12. ① 기업은 공식 조직 기업 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② 기업 내 동호회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보통 탈퇴만을 생각하면 '공식 조직이라고 해서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가?'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기업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자발적 결사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③ 기업에서 기업 내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은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완화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기업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④ 정의적인 관계란 정서적 관계라고 생각하면 쉽다. 기업 내 동호회 같은 비공식 조직의 인간관계는 1차적 (인격적, 자발적, 비형식적) 관계 즉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공식 조직의 인간관계는 공식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규나 공식적 절차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지는 비인격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이다.

13. 을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는 기능론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생각넓히기

기능론의 기본적인 질문과 대답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여 생각하는 관념은 사회학 성립 시기부터 널리 퍼져 있었고, 뒤르켐의 저작에서 특히 잘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체의 모형이 사회학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고헌을 하게 된 것은 파슨즈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형성된 구조기능주의가 대두하면서부터다. 기본적인 구조기능주의 전망은 개인이나 집단보다는 전체 사회의 제도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강조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그 기본적인 질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성원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의해 교체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은 계속 유지되고 전승되는가?"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사회가 조직된 사회생활의 전제조건이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이때 욕구는 기능, 수단은 구조에 해당한다. 구조기능주의의 전제는 사회에는 그 존속을 위해 수행되어야만 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것들은 구조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기능주의의 목표는 주로 사회생활의 조건과 욕구를 밝혀내고, 주어진 사회가 그 조건이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을 찾아내는 데 있다.

① 기능론적 관점은 유기체가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와 같이, 예컨대 사람이 손을 다쳐 피를 흘리거나 병이 들면 여러 기관들이 작용하여 피를 멈추게 하고 병을 낳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와 같이, 사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들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② 갈등론적 관점은 모든 사회에는 갈등이 편재하고, 사회는 그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에 의해 통합되고, 갈등이 변동의 요인이며, 변동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
③ 항상성이란 자동정상화장치(自動正常化裝置)라고도 하며 외부환경과 생물체내의 변화에 대응하여 순간순간 생물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사회가 항상성을 갖는다는 말은 사회를 유기체로 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④ 사회 문제를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자동 조정 장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에 입각한 것입니다.

14. 실증적 연구 방법의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가 반드시 숫자로 바뀌어야 합니다(계량화). 숫자로 바뀌지 않으면 좌표축에 점을 찍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집된 자료를 숫자로 바꾸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어머니와 자식 간의 친밀도라고만 하면 좌표축에 점을 찍을 수 없지만 이것을 대화 시간으로 바꾸면 좌표축에 점을 찍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변수와 변수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해도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① 과학은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과 가치의 분리는 실증적 연구 방법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의 행위에 수반하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베버가 가치중립을 강조했던 것을 보면 사실과 가치의 분리는 해석적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지켜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실증적 연구 방법이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은 옳은 진술입니다.

② 방법론적 이원론이란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두 개라는 말입니다. 해석적 연구 방법의 입장입니다.

③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강조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할 때 물의 의도는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의미가 없지만 인간의 행위는 그 내심에 속하는 동기의 의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해석적 연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달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④ 해석적 연구 방법은 생활 세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 대상자가 구성하는 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라고 표현합니다.

15. ① 물가는 총공급과 총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GNP나 GDP의 증감만을 아는 것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을 알 수 없습니다. 총공급이 증가하면 GDP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② 증가율은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이란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사이에 나타난 변화 속도와 폭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100에서 150으로 변화하면 그 증가율은 50% $(\frac{150-100}{100}\times 100=50)$가 되지만 150에서 100으로 변화하면 그 감소율은 약 33% $(\frac{150-100}{150}\times 100 \fallingdotseq 33)$가 됩니다. 변화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얼마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100에서 110으로 증가한 것이나 110에서 120으로 증가한 것은 모두 10만큼 증가한 것이지만 원래 숫자가 100과 110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증가율은 다릅니다.

③ 해외수취요소득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해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받은 수입액을 말합니다. GNP에 해외수취요소소득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GNP는 자국민의 자국내에서의 생산과 합쳐서 나온 값이므로 GNP에 변화가 없었다고 해서 해외수취요소소득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수취요소소득은 감소했지만 자국민의 자국내의 생산이 증가하면 GNP는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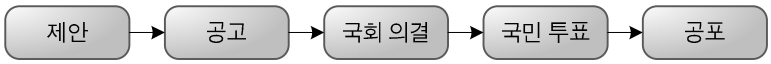
④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도 GDP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갑국에 생산 공장을 신설한 것은 2011년에 나타난 변화의 요인이 됩니다.

16.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

② 헌법 개정안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frac{2}{3}$ 이상의 찬성입니다.

③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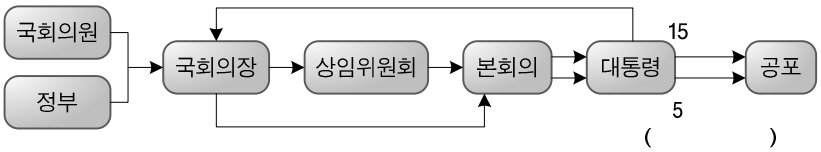
60 30



- 20 2/3 -
-

④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10 (15)



( )

17. A재는 사적 재화, B재는 공유 자원, C재는 다운로드 서비스나 케이블 TV와 같은 재화, D재는 공공재입니다.

① A재는 공유성과 배제성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사적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② B재는 공유자원으로서 과다하게 소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공유 자원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인은 다른 사람보다 가능한 많은 양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며, 이로 인해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③ 공공재의 경우 타인의 공동 소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무임승차 문제라고 하고 무임승차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케이블 TV나 다운로드 서비스는 자신이 소비하거나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비공유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공유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공급자에게 대가가 지급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수준의 양이 공급될 수 없습니다. 즉 공공재는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분		경합성	
		유	무
배제성	유	가방, 옷, 막히는 유료 도로	케이블 TV, 막히지 않는 유료 도로
	무	바닷 속 물고기, 막히는 무료 도로	치안, 국방,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

18. A의 사례는 긴급피난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있지만 긴급피난은 어떤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은 매우 억울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A는 주거 침입으로 주인의 사실상의 평온한 주거를 방해받은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B의 경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부상당한 사람은 B를 때리던 사람입니다. 다만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피하면서 어깨를 한 차례 밀치는 행위가 정당방위인가 정당행위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상대방의 도발이나 폭행행위 또는 강제연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③번 지문도 옳은 진술입니다.

① A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

② A, B 행위 모두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③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히 이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례에서는 A의 주거침입이나 B의 폭행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이지만 A와 B가 처한 정당화 상황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④ 사실 B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기보다는 정당행위에 가까워 보이지만 출제자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출제한 것 같습니다(대법원 1995. 2. 28 94도 2746).

19. 환율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환율은 외국의 화폐, 즉 외환이라는 상품에 붙여진 가격을 뜻합니다.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화를 외화로 교환한다는 것은 외화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가격이 오르는 상품은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품은 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① 엔화로 표시된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엔화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엔화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하기 전에 빨리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환을 미루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②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엔화를 사야 합니다. 빨리 사서 여행을 앞당기는 행위는 합리적입니다.

③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야 하는 데 달러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대금 결제를 미루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④ 달러를 소지하고 있다면 달러의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 버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①

20. ① 2010년의 실업률은 $\frac{32\%}{48\%+32\%}=\frac{32\%}{80\%}\times 100=40(\%)$이고,

2011년의 실업률은 $\frac{28\%}{42\%+28\%}\times 100=\frac{28\%}{70\%}\times 100=40(\%)$입니다.

② 2010년의 고용률은 $\frac{48\%}{48\%+32\%+20\%}=\frac{48\%}{100\%}\times 100=48(\%)$이고,

2011년의 고용률은 $\frac{42\%}{42\%+28\%+30\%}\times 100=\frac{42\%}{100\%}\times 100=42(\%)$입니다.

③ 2010년 경제 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의 80%이고 2011년의 경제 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의 70%이다.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는 변동이 없으므로 경제 활동인구는 감소하였다.

④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노동 가능인구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고용률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면 취업자의 증감 여부를 알 수 있다.

※자료가 비율만을 제시하고 있을 때 비율을 근거로 절대적 수치를 추론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비율만을 제시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절대적 수치의 추론이나 비교도 가능합니다. 비율을 합하여 100이 된다는 것은 표본이 하나의 집단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표본 안에서의 비교는 물론 비율끼리 더하거나 빼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위의 문제에서 비율을 더해서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은 제시된 자료의 비율이 모두 2010년이나 2011년의 노동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개념		지표	
노동 가능 인구	만 15세 이상의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frac{B}{A}\times 100$
경제 활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인구	실업률(%)	$\frac{D}{B}\times 100$
비경제 활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 중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	고용률(%)	$\frac{C}{A}\times 100$